##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물건너 가나

# 李대통령 공약 … 정부 특단대책 세워야

### 국토부, 내년 예산 100억원 줄여 편성

###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공조 나서길"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2012년) 사업이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재원 조달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은 어려운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사업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사업 현황**=현재로서는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다. 국토해양부는 호남고속철도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완공에 필요한 기본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필요한 관련 자료 및 기술적 내용, 재원 조달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해양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관련 내년 예산을 참여정부에서 세운 기본계획상의 재정 운용 계획에 의거, 2천620억원으로 편성,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이는 당초 재정운용 계획안보다 100억원이나 적은 것이며 전남도의 내년 예산 요구액(5천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토해양부는 당초 오는 6월 밝히기로 했던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용역 결과를 8월로 연기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에대해 "정부가 광주-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수요 부족을 용역 연기의 이유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입장**=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밝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당장 2017년 완공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계획상의 재정 운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되는 재정 5조8천억원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기에 투입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볼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씩 투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2009년 예산이 2천620억원만 편성됐다는 점에서 정부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또 재원 문제 뿐 아니라 환경 갈등 및 문화재 발굴, 노선 갈등, 민원제기 등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한 공기 단축을 제약할 수 있는 요건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단의 대책 절실**=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장관 출신의 이용섭 의원은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는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만큼 정부는 재정 운용 등에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의 공조도 요구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 광주·전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SOC사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호남고속철도가 경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의체나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 조기 완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8일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이날 오후 광주공장에 모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총파업은 예고된 사태

### 使 구조조정에 勞 고용보장 맞서

### '노사 윈윈' 새 문화 정착 아쉬워

금호타이어㈜ 노조는 8일 광주·곡성·평택 등 3개 공장에서 조합원 3천900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 방안에 반대하고 기본급 13만여원과 정기 상여금 50% 인상, 노조의 경영참가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영업손실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노조의 이번 총파업 돌입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공장의 적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되면서 사측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들자 노조측이 격렬하게 반발, 결국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사측은 회사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노측도 이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이번 총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평택 등 국내 3곳과 중국 3곳 등 모두 6곳의 공장에서 지난해 총 2조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중 국내 매출은 1조8천3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0%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공장의 수익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지난해에만 250억원대의 적자를 냈고, 이 적자가 광주공장에서만 발생한데 이어 곡성공장도 적자가 우려되자 사측은 광주·곡성공장 4천878명의 직원 가운데 향후 3개월 동안 431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사측 관계자는 "수출과 원재료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공장의 적자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역할과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광주공장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며 "사측은 파업기간에도 교섭에 임해 노조의 요구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되 교섭진행과는 별개로 파업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파업과정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이번 구조조정이 광주공장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공장 전체 3천9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고용위기로 인식,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노사가 조인한 특별합의서의 고용보장에 대한 훼손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개악안 철회 없이는 총파업도 중단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파업중에도 대화창구는 항상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3개조별 4시간씩 부분파업에 따른 매출손실은 133억원을 기록했고, 8일부터 총파업으로 인한 1일 매출손실은 50억원에 달한다.

이날 광주·전남경총은 성명을 통해 "연례적인 파업은 당해 기업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의 피해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와 기차차의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민간 강제적 에너지절약'

## 이틀만에 말 바꿔 논란 예상

### 부처간 이견 가능성도

정부는 8일 2단계 고유가 위기 관리 대책 (Contingency Plan)을 배럴당 170달러(두바이유 기준)가 아닌 150달러를 넘기면 시행하고 민간 부문에도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특히 정부가 1단계 대책을 시행할 당시 유가가 오르더라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면 민간에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틀 만에 계획을 바꿔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단계 대책 가운데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검토중인 조치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영업제한,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으로 1단계 대책에서 권장사항으로 제시된 것들이다.

따라서 2단계 대책이 시행되면 대중목욕탕의 격주 휴무와 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민간에 대한 강제적 절약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다며 민간 부문은 에너지절약을 권장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틀 만에 이 조항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방점을 두면서 민간에도 강제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지경부는 수급의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권한이 없는 재정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민동석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 사의

### "장관 물러나는데 대표가 자리 지켜서야…"

지난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이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정책관은 지난 7일 개각 발표가 나기 직전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에게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쇠고기 문제로 장관이 물러나는데 협상 대표로서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며 "외교부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며,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마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현재 심경과 소회를 담아 농식품부 전 직원에게 '존경하는 농식품부 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편지로 남겼다. 편지에서 민 정책관은 '불평등 협상' 비난을 의식한 듯 "국제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고, 내 입장만 강조할 수 없는 상대성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라면서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협상 지침을 만들고, 그 속에서 국익을 놓고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하는 것이 협상"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저와 농식품부 가족들은 피를 말리는 협상을 마친 뒤 갑자기 닥쳐온 정치적 광란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근거없는 괴담과 선전, 선동의 거대한 물결을 온 몸으로 거슬러 나갔으나 귀를 막은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다만 돌이켜보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협상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변화된 정부 정책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잘못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통 부재'를 시인했다.

/연합뉴스